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347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3. 11. 29. (제 21차)	

(주)광주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김 주 현
제출 연월일	2023. 11. 29.

## 1. 의결주문

(주)광주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하고,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에 조치대상자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<별지>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하며, 「질서위반 행위규제법」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<별지>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.

## 2. 제안이유

(주)광주은행에 대해 실시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·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골자

「외국환거래법」상 은행의 확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(주)광주은행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고자 함

## 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<붙임>

다. 관계부서 협의

- 제10차, 제12차,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(2023.4.20., 5.9., 5.26.) 심의필
- 제17차, 제20차, 제21차 안전검토 소위원회(2023.9.21., 11.9., 11.23.) 심의필

<별지>

(주)광주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## 1. 조치내용

### ☐ 기관에 대한 조치

- 논현지점에 대해서는 「외국환거래법」 위반과 관련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광주은행에 대해 과징금 1,474,486원\* 부과 건의

\* 각 영업소별 과징금 합계액이며, 영업소별 위반사실 및 과징금 금액은 다음과 같음

지점	위반사실	과징금 금액
논현지점	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	1,474,486원

- 조치사유 : 외국환거래법 위반(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)
- 법적근거 : 「외국환거래법」 제8조(외국환업무의 등록 등) 제6항  
「외국환거래법」 제12조(인가의 취소 등) 제1항 제5호의2, 제5항  
「외국환거래법」 제12조의2(과징금) 제1항, 제2항  
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17조(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) 제4호  
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22조(인가의 취소 등), <별표2>  
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23조(과징금의 부과기준 등), <별표3>  
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2-1조의2(지급 및 수령) 제1항, 제4항  
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4-2조(지급등의 절차) 제1항

## 2. 조치사유

### 가.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

□ 「외국환거래법」 제8조 제6항,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17조 제4호,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2-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(이하 “증빙서류”)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,

○ (주)광주은행 논현지점은 2022. 1. 14. ~ 1. 19. 기간 중 (주)◇◇◇◇◇◇◇◇◇◇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(2건, 4,796,832불)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,

-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가 있어 지급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\*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

\* 제출받은 Purchase contract의 1번 항목에는 The Buyer: (주)◇◇◇◇◇◇◇◇◇◇, The seller: 수취인으로 기재된 반면, Signature를 기재하는 란에는 The Buyer: 수취인의 인감, The seller: (주)◇◇◇◇◇◇◇◇◇◇의 인감이 각각 날인되어 증빙서류에 명백한 형식적 하자가 있음

### 영업소별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건수 및 금액

(단위: 건, 미달러)

영업소	업체명	업체별 거래내역		증빙서류 하자요류 유형
		건수	금액	
논현지점	(주)◇◇◇◇◇◇◇◇◇◇	2	4,796,832	계약서상 판매자와 구매자를 바꾸어 서명

< 붙임 >

## 관계 법규

### □ 「외국환거래법」

**제8조(외국환업무의 등록 등)**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2조(인가의 취소 등)**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(영업소를 포함한다)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.

5의2. 제8조 제6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

⑤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2조의2(과징금)**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
2.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
3.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

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.

1.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2. 담보의 변경,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강제집행, 경매의 개시, 파산선고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 □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

**제17조(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)**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

1.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거래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할 것
- 2.~3. (생략)
4. 그 밖에 외국환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

**제22조(인가의 취소 등)**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### <별표 2>

등록·인가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(제22조 관련)

#### 1. 일반기준

기획재정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100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위반행위가 등록 또는 인가 취소 대상인 경우(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 취소인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고,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위반행위가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한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로 처분을 갈음할 수 있다.

##### 가. 가중 사유

- 1) 1년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각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총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하되,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총업무정지기간을 기준으로 가중 처분할 수 있다.
- 2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
##### 나. 감경 사유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외환시장 및 금융기관 이용자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외국환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
- 4) 위반 사유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

#### 2. 개별기준

해당 행위	해당 법조문	처분기준
바. 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2	업무정지 2개월

**제23조(과징금의 부과기준 등)**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<별표 3>

과징금의 부과기준(제23조 관련)

1. 기획재정부장관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,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에 다음 각 목의 부과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.

가.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경우: 100분의 20

나. 업무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경우: 100분의 40

다.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경우: 100분의 50

라. 업무정지 4개월에 해당하는 경우: 100분의 70
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여야 한다. 다만, 별표 2 제1호 나목 1) 또는 4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가.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

나.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

□ 「외국환거래규정」

**제2-1조의2(지급 및 수령)** ① 외국환은행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급 또는 수령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4장에서 정한 지급등의 절차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.

②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법·영 및 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하며, 지급신청서 및 제4-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령의 경우 확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④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지급등의 증빙서류 및 취득 경위 입증서류를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.

**제4-2조(지급등의 절차)** ①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(이하 이 장에서 “지급등의 증빙서류”라 한다)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4-3조(거주자의 지급등 절차예외)** ①제4-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(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)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할 수 있다.

1.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
  - 가.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 이내(제7-2조 제8호의 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)인 경우
  - 나.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당해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

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금융시장분석과	은행검사2국
연 락 처	2100-2906	3145-7202